

# 중기부, '메르스급 비상'... 中 小 企 支援책 준비중

### 실물경기 하방 우려... 경영안정자금 · 상환연장 추진

### "국가재난에 정부 선제적 대응 절실"...추경 편성론 '술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중소기업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버금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가 가장 치명적인 만큼 중기부는 기획재정부가 큰 틀의 지원방향을 마련하면 이에 발맞춰 각종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 및 경기상황에 따라 중기부의 지원규모는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메르스 당시 대응했던 사업들에 준해 준비 중"이라며 "경기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각 지방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메르스와 가뭄 지원에 투입했다. 부 승격 전이던 당시 중기청은 8180억원의 추경예산을 배정받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썼다.

중기부는 메르스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준비태세를 갖춰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우한폐렴으로 위축된 경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대출금리 인하, 보증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각적 지원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초기이긴 하지만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만큼 소진공 조사 연구실을 필두로 전국 지부에서 정확한 상황 진단을 위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역시 각 지방청을 통해 중국 우한 지역에 지사를 둔 진출기업을 파악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국 전역이 비상상태인 만큼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수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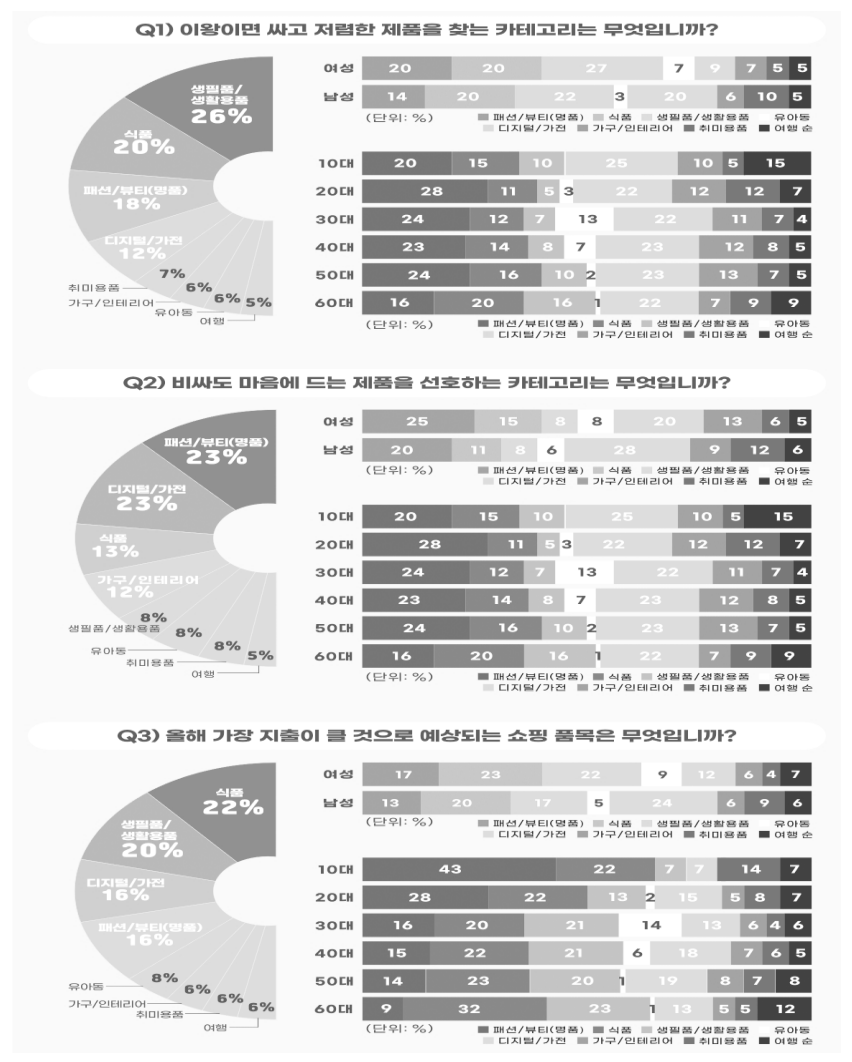
정부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시 항만정책과 관계자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방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난 상황에 맞춰 경영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저리 융자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우한폐렴 사태

추이를 살펴보고 피해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메르스 당시 펼쳤던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과 같은 내수소비 촉진운동 캠페인을 고려 중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이미 2000명을 넘어서고

국내에 확진자가 속속 등장하는 등 메르스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이라며 "다중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추경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1

## 올해 소비트렌드는 '플렉스하는 자린고비'... "명품에 지갑 연다"



올해는 식품과 생필품을 가성비 따지는 대신 명품이나 프리미엄 가전처럼 고가 제품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플렉스 자린고비' 소비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옥션 방문 고객 19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소비심리 및 소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왕이면 싸고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상품군을 묻는 질문에는 4명 중 1명이 '생필품/생활용품'(26%)을 꼽았다. '식품'을 꼽는 응답자도 20%에 달하며 가성비 소비 성향을 보였다. 이어 패션/뷰티(18%), 디지털/가전(12%), △취미용품(7%)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싸도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는 품목으로는 명품을 포함한 패션/뷰티(23%)와 디지털/가전(23%)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식품(13%)과 △가구/인테리어(12%) 순이다. 성별로 살펴봐도 알뜰구매 품목

으로 여성(27%)과 남성(22%) 모두 '생필품/생활용품'을 꼽았다. 다만, 가격을 개의치 않는 품목으로는 여성은 '패션/뷰티(명품)'(25%)를 꼽는 반면 남성은 '디지털/가전'(28%) 제품을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올해 가장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쇼핑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다수가 식품(22%)과 생필품(20%)을 꼽았다. 쌀 제품을 선호하는 품목들이지만, 절대적인 지출 규모는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이코리아는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플렉스 성향이 강한 10대와 20대는 가장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패션/뷰티(명품)를 선택해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올해 가장 씬씀이를 줄일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4명 중 1명인 25%가 패션/뷰티(명품)를 꼽았다.

이점업 이베이코리아 마케팅본부 본부장은 "실질적인 지출계획은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심리와 현실 소비 사이에 괴리가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전없는 '타다'... 정부 원칙부터 세워야



정부가 타다-택시업계로 대표되는 신·구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 메커니즘을 내달까지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 또 다시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해당사자 간의 타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의공유 협약에 더해 정부 재정을 통한 융자지원까지도 고려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타협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할 상황, 원칙부터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 '규제혁신' 열쇠 한걸음 모델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기칭 '한걸음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은 공유경제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의 핵심규제를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풀이보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사업 진출 △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 △사회적 타협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 골격은 기존 타협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견수렴과 사회적 타협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정부 역할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규제개선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의 골장토론(해커톤)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되,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타협 방안으로는 상생 혁신자금과 이익공유 협약 체결(MOU), 협동조합 결성, 규제 샌드박스 등을 예시로 들었다.

홍 부총리가 한걸음 모델 완료 시한을 이달 또는 2월로 꼭 집어 말했지만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 "현재 모델을 구상하는 단계다.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기재부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있어 민간과의 소통도 아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했다. 한걸음 모델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업계의 의견수렴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은 일종의 예시일 뿐"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 ◇ 한걸음 모델 적용 원칙이 우선... 개입할 때는 확실히 해야

전문가들은 한걸음 모델이 제대로 된 타협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부터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걸음 모델이 적용돼야 할 상황, 산업 특성에 관한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우호준순으로 생겨날 신산업이 기존 산업과의 마찰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걸음모델과 관련해 "그동안 신·구산업 갈등이 타다와 택시업계에 국한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원리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며 "신산업 출현으로 인한 기존산업의 피해에 정부 책임이 있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을 예로 들며 "택시 산업은 정부의 면허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타다가 보호막을 깬다. 그렇다면 (타다의 진출을 위해)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거나 신산업에 추가적인 세금(법인세)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기존 산업이 기술적인 측면에 의해 신산업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한걸음모델로) 막을 수 없고 정부도 개입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안 타깝지만 쇠퇴하는 산업 근로자들이 신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신·구산업 갈등 문제를 두고 기존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타협 기구에 소비자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탈많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 강화해야"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이 발표한 '홍공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

기화를 유발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를 인터뷰한 결과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율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도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 조항이 아닌데다 정비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드네이터 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공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대신 전문성 및 자급력이 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범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에선 '코드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정비사업에서도 주민지원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재개발 코드네이터 사례를 국내 공공관리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가치 소비하려면...

### '이스토어 36.5+'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탄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이스토어 36.5플러스(e-store 36.5+)'의 구축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회적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판로지원 사업 정보도 알 수 있다.

## 작년 기업들 자본시장서 175조 조달...주식 줄고 채권 늘어

지난 2019년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5조 6857억원(3.3%)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 주식은 유상증자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가 줄었고, 채권은 일반기업의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가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밝힌 '2019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총 175조4999억원으로 전년(169조

규모별 통한 주식·외사채 발행실적(주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증감률)
발행총액	1,311,143	1,201,154	1,543,810	1,698,142	1,754,999	56,857(3.3)
주식	80,121	102,575	103,572	88,959	53,172	△35,787(△40.2)
외사채	1,231,022	1,098,579	1,440,238	1,609,183	1,701,827	92,644(5.8)

주1)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납입일 기준  
주2) 신주모집을 통한 자금 발행실적이며 구주매출 출자제한 현물출자·DR 등은 제외

8142억원)과 비교해 5조6857억원(3.3%) 증가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연도별 주식·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131조 1143억원)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다. 주식은 2017년부터 감소세이고, 채권은 2016년 감소한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 발행규모는 156건·5조 3172억원으로 전년(170건·8조 8959억원) 대비 14건·3조5787억원(40.2%) 줄었다. 뉴스1